제2019-16호 2019. 10. 4.



국제경제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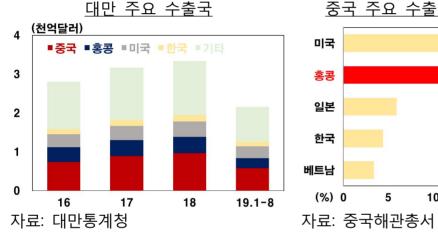
조사국 국제경제부 중국경제팀 박정하 조사역(4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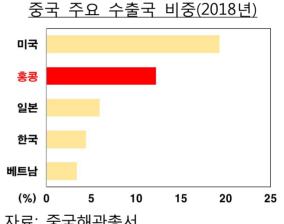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 동향 및 전망

- ◆ (검토배경) 최근 중국의 대만행 개인여행 잠정 중단 조치 및 홍콩의 '범죄 인 인도법' 관련 시위 등으로 중국과 대만·홍콩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
 -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 → 중국과 대만·홍콩 간 관계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연계성 및 향후 전 망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
- ◆ 중국과 대만·홍콩 간 관계의 변화과정
 - ① [중국-대만] 국공내전 이후 대립하던 양안은 대만 민주화('87년) 이후 긴장완화기(국민당 집권시)와 갈등기(민진당 집권시)를 반복
 - 차이잉원 총통 집권('16년~) 이후 대만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 비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 등으로 양안 관계 갈등이 격화
 - ② [중국-홍콩]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할양되었던 홍콩은 중국 반환(*97년)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 및 협력 관계를 표출
 - * 중국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홍콩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일정 기 간(1997~2047년) 조건부로 공존하는 시스템
 - 최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통해 자치권 관련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반(反)중국' 정서가 강화되는 양상
- ◆ 중국과 대만·홍콩 간 경제적 연계성 및 전망
 - ① [중국-대만]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29.0%, '18년) 및 투자(37.3%) 지역
 -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또한 대만과의 교역 부진 및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 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

배부처: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 ② [중국-홍콩] 홍콩 전체 교역 중 대중국 거래가 50.4%이며 홍콩도 중국 제2의 수출지역인 가운데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중국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및 위안화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 홍콩이 주요한 역할
-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속에 현재의 시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홍콩은 수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위축될 가능성
- 또한 홍콩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관련 투자가 감소하고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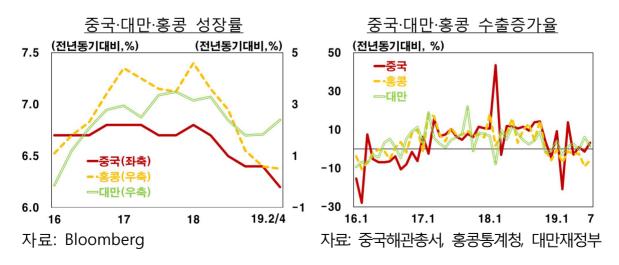
-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악화는 이들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성장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홍콩은 시위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양안 관계는 대만의 내년 1월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
 - →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u>목 차</u>

검토배경

T

- □ 최근 중국의 대만행 개인여행 잠정 중단 조치 및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관련 시위 등으로 중국과 대만·홍콩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
 - 중국-대만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대만 간 교류 강화로 '하나의 중국'정책을 부정^{*}하는 등 관계 악화 가능성 확대
 - *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6월)'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
 - 중국-홍콩 관계도 우산혁명(2014년) 및 금번 시위 등을 통해 홍콩 시민의 '중국화'에 대한 반발이 표출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 당초 덩샤오핑이 대만과의 통일 방안으로 1979년 제시한 개념으로 중국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홍콩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가 일정 기간 (1997~2047년) 조건부로 공존하는 제도
- □ 중국과 대만·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중국의존도가 높은 대만·홍콩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성장률이 둔화*
 - * 다만 대만의 경우 2019.2/4분기에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중심으로 대미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
 - 중국경제도 금융 및 무역 연계성과 첨단기술 공급 채널로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대만·홍콩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



⇒ 중국과 대만·홍콩 간 관계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연계성 및 향후 전망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

1. 중국-대만 관계

(국공내전 이후 1990년대까지)

- □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배한 이후 대만 지역으로 이주 (1949년)하면서 양안관계(兩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가 시작
 - * 중국과 대만간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용어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안 (西岸)의 중국 대륙과 동안(東岸)의 대만이 마주보고 있는 것에서 명명
 - ㅇ 이후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며 약 30년간 중국과 대립관계 유지
 - 중국은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를, 대만은 '삼불정책(三不政策)^{*} 및 삼민주의(三民主義)^{**}'를 각각 통일 정책으로 제시
 - *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 1987년 대만에서의 계엄 해제 및 민주화 이후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
 - 양안은 1992년 '9.2합의(9·2共識)'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 칙하에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의견을 존중하자는 데 합의

(2000년대 이후)

- □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陳水扁, 2000~08년)이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며 양안관계는 다시 갈등기에 진입
 - *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당과 달리 대만의 독립과 자유주의적 이념을 주장(1987년 출범)
 - 다만 일부 지역간 해운, 항공, 우편 등의 교류를 허용하는 소삼통 (小三通, 2001년)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양안간 경제적 교류는 유지
 - □ 한편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2008~16년) 총통 집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며 양안간 교류도 확대

- 전국적으로 양안간의 해운, 항공, 우편 등의 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대삼통(大三通) 제도 실시(2008년)
- 실질적 FTA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도 체결(2010년)
 - * 800여개 품목 관세의 단계적 철폐, 원자력 안전 협력 협의, 5대 신흥산업 (LED 조명, 전기자동차, 저온물류 등)분야 상호 협력 강화 등 포함
- 또한 중국인의 대만 단체여행이 허용(2008년)된 데 이어 2011년부터 가능해진 개인여행은 이후 시범지역이 47개로 확대

(최근 동향)

- □ 현재의 차이잉원(蔡英文, 2016~) 대만 총통은 민주진보당 소속으로 집권 기간 동안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중국과 대립
 - * 최근의 홍콩 시위를 지지하면서 일국양제 정책도 강력 비판(2019.6월)
 -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신남향(新南向)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 * ASEAN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2016.9월 시작
- □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치·외교적인 조치들을 통해 대만에 압력
 - 중국 정부는 대만 수교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
 - 차이잉원 집권 후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6개의 국가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2019.9월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6개 에 불과
 - 또한 최근 시행한 중국인의 대만 개인여행^{*}을 중단시키는 조치(8.1 일)는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 베이징 등 8개 도시에서는 대만 단체여행도 금지 예정(SCMP, 2019.8.27일)
 - 향후 양안관계의 향방은 내년 1월 예정된 총통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
 - * 차이잉원 현 총통과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는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시 시장 간의 경합이 예상

2. 중국-홍콩 관계

(반환 이전)

- □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1842년)을 통해 홍콩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 으며 1898년에는 홍콩 주변 섬들(중국 본토 근해의 235개)도 영국이 99년간 조차(租借)하는 조약이 추가적으로 체결
 - 홍콩에는 영국의 행정, 교육,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무역 및 금융 허브로 발전하면서 중국과는 완전 분리
- □ 1980년대 초 영국이 홍콩 주변 섬들의 조차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동 요구를 거부하며 홍콩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
 - 영국은 홍콩이 50년간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지 된다는 조건하에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동의(1984년)

(반환 이후 2010년대까지)

- □ 홍콩은 중국 반환(1997년) 이후 일국양제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 및 협력 관계를 표출
 - 국가보안법 반대(2003년) 및 우산혁명(2014년) 등 일련의 시위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잠재

홍콩 자치권 관련 주요 시위

발생시기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2003년)	 ▶자유 탄압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 중국 정부에 대한 전복 기도, 치안 방해 등 국가 안보 위협 범죄를 금지 ▶2014년 우산혁명 이전까지 중국 천안문 사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시위(35~50만명 참가)로 약 2개월 간 지속 ▶홍콩 정부는 결국 동 법안을 철회
우산혁명 (2014년)	▶중국 정부가 2017년 시행예정이던 홍콩의 직선제 선거에서 행정 장관 후보자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정한 3명으로 한정 (2014.8월)▶실질적인 간선제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2014.9월부터 70여일간 반대 시위 진행▶우산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행정장관 선거는 간선제로 유지

- 반면 일반적인 FTA보다 범위가 넓은 중국-홍콩간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2003년) 하는 등 경제적 협력 관계는 확대
 - * 상품교역 관세는 모두 철폐되었으며, 서비스교역의 경우에도 중국은 WTO 분류 기준 총 서비스 산업 160개 분야 중 153개를 홍콩에 개방

(최근 동향)

- □ 최근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extradition bill)*' 반대 관련 시위는 정치적·경제적 반(反)중국 정서 확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
 - *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 등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범죄인 송환을 허용하는 내용
 - 금번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에 반발하며 정치적인 자치권을 강하게 주장
 -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던 6.9일 시위 이후 수 차례 시위, 파업, 공항 점거 등의 형태로 지속
 -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결국 '범죄인 인도법' 을 공식 철회하며 시민단체의 5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를 수용(9.4일)
 - * ① 범죄인 인도법 철회, ②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③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④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⑤ 행정장 관 직선제 실시
 - 또한 금번 시위 배경에는 반환 이후 중국인의 홍콩 유입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 불평등 확대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적 불만 요인도 내재
 - * 중국인 이민자 수는 101만명으로 전체 홍콩 인구(741만명)의 13.6%(2017년)
 - 주택가격지수로 대변되는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010년 이후 약 2.5배 상승
 - (1999=100) <u>2010</u> <u>2013</u> <u>2016</u> <u>2018</u> <u>2019.7</u> ▶ 홍콩 주택가격지수 162.3 245.2 306.1 368.3 394.4
 - 홍콩 지니계수는 0.539(2016년)에 달해 미국(0.391) 및 싱가포르 (0.356) 등 여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홍콩통계청)

중국과 대만·홍콩 간 경제적 연계성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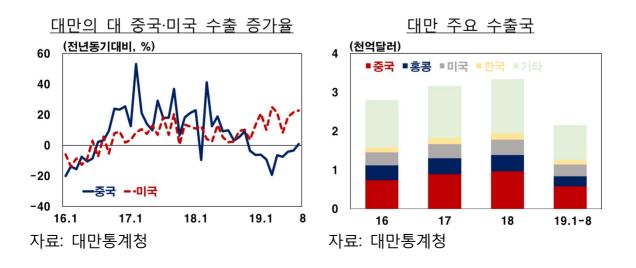
1. 중국-대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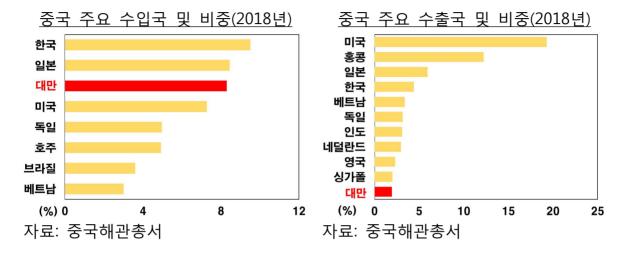
Ш

① 무역

- □ 양안은 중국(2001년)과 대만(2002년)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 교역이 크게 확대
 - 특히 양안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정치적 제약 요인을 완화할 수 있었던 홍콩이 중개무역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안간 교류가 촉진
- □ 중국은 대만 총 수출의 29.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지역(2018년)
 - 대만경제는 중국으로 부품 및 반제품*을 수출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
 - * 대만의 대중국 수출중 부품 및 반제품은 각각 48% 및 32%를 차지
 - 이중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비중이 56.9%이며 화학제품*이 10.3%로 2번째
 - * 대만 화학산업의 성장은 대만의 산업고도화가 아닌 중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순 원료 생산의 결과라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



- □ 대만 역시 중국의 3번째 수입국과 11번째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2018년)
 - 중국과 대만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상호간 교역액이 2,262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중국이 1,290억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2018년)



② 투자

- □ 대만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2018년)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2010년(83.8%)을 정점으로 하락세
 - 2018년 대만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228억달러인 반면 대중국 투자액은 85억달러로 8.1% 감소

(%) <u>2010</u> <u>2012</u> <u>2014</u> <u>2016</u> <u>2018</u> ▶ 대중국 투자 비중 83.8 61.2 58.5 44.4 37.3

- 이는 중국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만 기업들의 해외투자 분산 노력에 기인
- □ 한편 대만 기업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본토에 다수 진출
 - 중국 증시에 상장된 대만 기업이 28개(2019.5월 기준, 券商中國)에 이르며, 대만 해외생산거점의 90%가 중국에 위치(2017년 기준, KOTRA)
 - 동 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중 상당수는 중국이 대미국 수출용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
 - 미국 기업 납품용 PC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중국 현지에서 위탁생산하는 대만 기업(Foxconn 등)도 다수

- 중국 수출 중 외국계 기업 수출 비중이 41.7%(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대만 기업이 최소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Citi, 2019.7월)
- 한편 최근 대만 정부는 과도한 대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장려를 촉진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
 - 2019년부터 토지 혜택,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대만기업 본국회귀투자(리쇼어링) 촉진방안'시행^{*}
 - * 금년 8월 현재 102개 대만 기업들이 5,047억 대만달러(약 19.3조원)의 본국 회귀투자를 승인받은 상황(대만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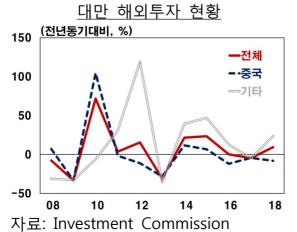
③ 여행

- □ 지난해 대만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191만명으로 전체 대만 관광객의 25.2%를 차지
 - 양안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다만 대만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이후 소폭 증가 내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감소세

(만명, %)	<u>2014</u>	<u>2015</u>	<u>2016</u>	<u>2017</u>	<u>2018</u>
전체 외국인 관광객	719.2	750.5	756.1	764.9	759.4
중국인 관광객 비중	45.8	44.4	36.2	25.9	25.2

□ 한편 중국 방문 대만인 여행객은 전체 방중 여행객의 4.3%(2018년)인 614만명으로 양안관계 악화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세*

*'15년 550만명→'16년 573만명 →'17년 587만명





(전망)

- □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및 중국 성장세 문화 등과 함께 대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이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국 정부의 대만 개인여행 금지조치(8.1일)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수입도 감소할 전망
 - 내년 1월까지 관광객이 70만명 감소(대만 여행사협회 추정)할 경우, 평균 지출액(2018년 기준) 감안시 약 10.5억달러 관광수입 감소 추정
 - 금년 대만 성장률*은 2% 초반까지 하락 예상(JP Morgan, Citi 등)
 - * GDP 성장률(%): 2017년 3.1 → 2018년 2.6 → 2019년 상반기 2.1
 - 미국이 대만의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기기 및 과련 부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만 수출 감소 우려*
 - * 다만 대만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따라 대만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감소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
- □ 한편 대만과의 교역 부진 및 대만 기업 리쇼어링 등은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
 -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 소재 대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 대만 기업의 약 30~50%가 이전할 경우, 2년간 177만~29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Citi, 2019.7월)
 - *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서 약 천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주요 대만 기업들의 중국 이탈은 중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중국제조 2025」등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지체를 초래하면서 핵심분야 기술개발에도 부정적 영향
 - 중국 최고 IT기업 화웨이(Huawei)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 92개중 대만 기업이 10개(미국 33개, 중국 25개, 일본 11개)(2018.11월)

2. 중국-홍콩

(현황)

① 무역

- □ 홍콩 전체 교역 중 대중국 거래가 50.4%를 차지하는 가운데 홍콩의 재수출* 중 중국의 비중도 55.1%(2018년)
 - * 홍콩은 총 수출의 약 98.9%가 재수출에 해당하는 높은 대외의존적 무역구조
 - 홍콩의 수출은 대중국 및 미국 수출이 큰 폭 줄어들며 2018.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
- □ 한편 홍콩은 미국에 이은 중국 제2의 수출지역(2018년 비중 12.2%)으로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 통로로서 역할
 -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2,351억달러중 미국 으로 재수출하는 금액이 295억달러로 12.5% 차지(2018년)*
 - *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금액은 948억달러로 40.3%
 - 미·중 양국간 상품수지 적자 및 흑자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홍콩의 재수출을 중국의 대미 수출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임

중국과 미국간 상품수지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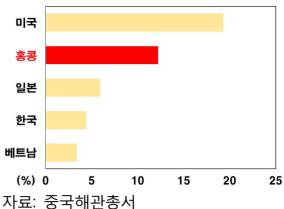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대미 상품수지 흑자	2,370	2,604	2,540	2,780	3,244
미국 대중 상품수지 적자	3,429	3,664	3,471	3,755	4,198
차 이	1,059	1,060	931	975	953

자료: 중국해관총서, US Census Bureau

○ 중국의 수출은 2019.1~8월중 0.2% 증가하였으며 베트남(16.5%)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도 큰 폭 증가(8.8%)하였으나 대홍콩 수출은 7.7% 감소



중국 주요 수출국 비중(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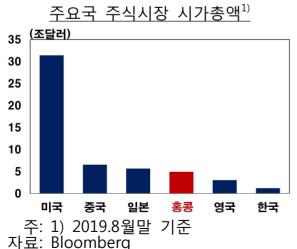
② 투자 및 금융

- □ 홍콩은 높은 대외신용도 및 선진적 법률시스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 기능을 수행
 - 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중국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및 자금조달, 위안화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 홍콩을 적극적으로 활용
- □ 홍콩은 2018년 기준 1,11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된 글로벌 3대 투자 지역(UNTCAD)
 -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중 홍콩을 통한 비중은 65.0%로 절대적인 비중(2018년)

(억달러, %)	<u>홍</u> 콩	<u>싱가포르</u>	<u>버진이일랜드</u>	<u>한국</u>	<u>케이만군도</u>	<u>일본</u>
▶ 대중 FDI 금액	899.2	52.1	47.1	46.7	40.7	38.0
▶ 대중 FDI 비중	65.0	3.8	3.4	3.4	2.9	2.7

- 한편 2017년말 누계 기준으로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 15.2조 홍콩 달러 중 중국이 25.5% 차지
- □ 홍콩 주식시장은 중국 주요 기업의 IPO시장일 뿐만 아니라 상하이 및 선전 주식시장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
 - 홍콩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글로벌 4위의 규모로 중국공상은행 등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Tencent, Xiaomi 등 중국 주요 IT 기업들도 상장
 - *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구성되는 항셍지수의 경우 25개 기업이 중국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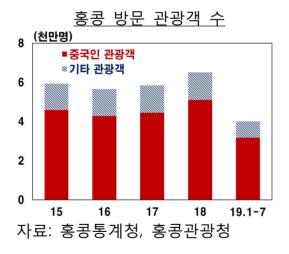
- 2018년중 중국기업의 전체 IPO(642억달러) 중 홍콩을 통한 IPO*가 54.5%(350억달러)로 상하이·선전(30.7%, 197억달러)을 추월
- * 홍콩 거래소 IPO 상위 10개사는 모두 중국 기업(KPMG)
- ㅇ 또한 중국과 홍콩은 교차거래를 통해 주식시장 개방도 적극 추진
 - 상하이 및 선전·홍콩 증권거래소간 상장된 주식을 상호 매매하는 후강통(滬港通, 14.11월) 및 선강통(深港通, 16.12월) 제도 출범
 - 금년 상반기중 후강통 및 선강통 제도를 통한 홍콩거래소에서의 거래규모는 1.2조 홍콩달러로 전체 거래의 10.7%*를 차지
 - *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에서 동 제도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4.9조 위안으로 전체 거래의 7.1%
- □ 이외에도 홍콩은 주요 위안화 역외센터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 상하이·광동성 4개 도시와 홍콩간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를 시작(2009년)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본격 추진
 - 2019.8월 기준 위안화는 글로벌 5번째 결제통화(비중 2.2%)이며, 특히 홍콩에서의 위안화 결제액이 전체의 76.4%를 차지(SWIFT)
 - (%) <u>홍콩</u> <u>영국</u> <u>싱가포르</u> <u>한국</u> <u>미국</u> <u>대만</u> ▶ 위안화 결제 비중 76.4 6.2 3.4 2.2 2.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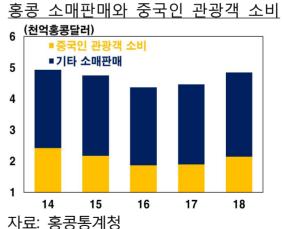




③ 여행

- □ 중국이 홍콩 개별관광을 허용(2003년) 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증가
 - 2018년중 5,104만명(전체 홍콩 방문 관광객의 78%)의 중국인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
 - 중국인 관광객 소비는 연간 홍콩 소매판매의 44.3%(2018년)를 차지 할 정도로 홍콩경제에 중요한 역할
 - 미·중 무역분쟁 및 시위 등 요인으로 홍콩의 소매판매*는 2019.2 월 이후 하락세
 - * 소매판매 증가율(%): 0.1(18.12월) → -10.2(19.2월) → -4.5(4월) → -11.4(7월)
- □ 한편 2018년중 중국 방문 홍콩인은 7,937만명*으로 전체 중국 방문자의 56.2% 수준
 - * 이중 당일 여행객이 5,117만명(64.5%)





(전망)

- □ 홍콩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더하여 시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상당폭 위축될 전망
 - 홍콩 정부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0~1%로 하향 조정(재정국, 8.15일) 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
 - * GDP 성장률(%): 2017년 3.8 → 2018년 3.0 → 2019년 상반기 0.6
 - ** BoA -0.1%, Morgan Stanley -0.3%
 - 수출*이 금년중 4% 내외 하락하여 2009년(-12.6%)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홍콩무역발전국, 9.23일)
 -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7년 8.0 → 2018년 7.4 → 2019년 상반기 -3.6
 - 특히 중국·홍콩간 관계 악화는 홍콩 관광업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홍콩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홍콩 사태 격화로 8월중 홍콩국제공항 이용 승객수가 전년동기대비 12.5%(85만명) 감소하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
 - * 당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홍콩 A형(H1N1)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급감
- □ 중국경제도 홍콩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홍콩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관련 투자가 급감할 소지
 - 특히 글로벌 금융허브로 기능하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홍콩의 불안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부정적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는 금년중 홍콩 증시 상장 (최대 150억달러 규모) 예정이었으나 시위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상장 연기(2019.8월)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는 홍콩을 보완할 금융허브로 상하이·선전 지역을 육성*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중
 - * 선전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지역으로 설정하여 2035년까지 금융혁신 및 위안화 국제화를 선도할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2019.8월)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악화는 이들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대만·홍콩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무역, 투자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하방압력이 확대될 소지
 - 중국경제의 경우에도 대만 및 홍콩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대만 제조기업의 '탈중국화'로 고용 및 수출이 위축될 수 있 고 홍콩의 물류·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저하될 수 있음
 - 2020년 샤오캉(小康)사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정 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만·홍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수
 - *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중산층 사회
- □ 홍콩 사태의 경우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상존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9.4일) 이후에도 시위*가 지속
 - * '우산혁명' 5주년 기념일 시위, 시민단체의 5가지 요구사항 수용 관련 시위 등(9.28-29일)
 - 다만 최근 홍콩경제가 시위 격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내부적 으로 비파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신용평가사 Fitch는 최근 홍콩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A로 하향 조정(9.6일)
 - 당초 우려되던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 대내외 파급 영향*,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개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 *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글로벌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1.8%에 불과 했던데 반해 2018년은 11.8%

-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
 - 미국 의회에서는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검토하여 홍콩이 향유 하는 대미 특혜*의 정당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법안 제출(2019.6월)
 - * 미국은 그동안 홍콩을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특별 대우하였으며 이는 홍콩이 국제금융 허브가 되는 데 중요 역할
- □ 한편 중국과 대만 관계의 경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
 - 일국양제 체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콩 사태로 인해 다소 열세였던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회복
 - * 7월중 차이잉원 지지율은 국민당 한궈위에 뒤쳐졌으나 8월 이후 추월하여 9.9일 현재 45.1%로 한궈위의 33.3%보다 앞서는 상태(蘋果, 9.9일)
- □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변화 는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 2018년 기준 대만과 홍콩은 각각 우리나라의 6위(208억달러), 4위 (460억달러)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지역이며 이들 지역을 통한 대중국 수출도 상당한 규모 차지
 - 특히 대대만 및 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3% 및 73.0% 수준
 - 또한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 중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82.6%
 - 대만·홍콩과의 관계 악화가 초래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약화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성장세 둔화에 더해 금융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중국경제 경착륙론 혹은 위기론이 확산될 소지
- ⇒ 홍콩 시위 전개 양상 및 중국의 대응, 양안간 갈등 격화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2012.12월
____,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2014.12월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중국의 대 홍콩 경제통합정책", 2018.8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홍콩 시위,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나?", 2019.8월
한국은행, "양안(兩岸)관계 변화과정과 전망", 2009.7월
____, "대만구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2019.3월
한국경제통상학회, "양안(兩岸)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2010.9월
한국무역협회,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2019.8월
한국사회과학학회, "대만 차이잉원 정부 신남향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2019.1월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대만 경제 '중국 의존' 현상의 경제적 요인 및 함의 ", 2017.8월

KOTRA, "중 - 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2017.5월 , "2019 국별 진출전략-대만", 2019.1월

Citi, "Leaving China to avoid the trade war and tech sanction?-A look at Taiwan's investment in China", 2019.6월

Economist, "Hong Kong remains crucially important to mainland China", 2019.8월

HKTDC, "Economic and Trade information on Hong Kong", 2019.8월 HSBC, "China's Greater Bay Area", 2018.8월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CEPA: a milestone in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2006.5월

JP Morgan, "Lessons from past events", 2019.8월

Nomura, "Trade tension: A look at the bottom-up evidence", 2019.9월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6월

世界經濟與政治論壇,《海峽兩岸經濟合作機制之歷史性考察》,2010.4월 香港工業貿易署,《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2018.12월 海峽兩岸關係法學研究會,《簡崙台灣政黨政治發展及其趨勢》,2010.6월 商務部,《積極推進香港與內地經貿領域深化合作》,2017.6월